

## 2012년 위기론 진단과 한국의 대응

정상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2012년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정치리더십 교체가 집중됨으로써 한반도 위기설이 회자되고 있다. 러시아는 3월에 대선이 있고, 북한은 4월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나 혹은 10월 당 창건기념일을 맞아 강성대국 진입 원년을 선포할 예정이다. 또한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고, 12월에는 한국 대선이 실시되며, 2013년 3월에는 중국의 주석이 교체된다.

개별 국가, 그리고 동북아시아 및 세계 정치경제를 진단해 본 결과 2012년 한반도에 특별히 새로운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며 리더십 교체와 외교정책 변화와의 경험적 연관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2012년 세계는 전통적인 군사안보보다 경제 등 비군사 영역에서의 안보 문제 해결이 시급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상황에서 3대 세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북한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목 차

1. 문제제기: 한국은 2012년 위기를 맞을 것인가
2. 2012년 남북한의 정치·경제 및 남북관계
  - 가. 한국의 정치·경제
  - 나. 북한의 정치·경제
3. 2012년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
  - 가. 미국의 정치·경제
  - 나. 중국의 정치·경제
  - 다. 일본의 정치·경제
  - 라. 러시아의 정치·경제
4. 2012년 국제 정치경제
5. 맺음말: 2012년 한반도 위기설 종합 진단

## 1. 문제제기: 한국은 2012년 위기를 맞을 것인가

- 2012년 한국과 미국 및 러시아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국은 리더십 교체가 있으며, 북한은 강성대국 진입 원년에 진입함.
  - 2012년 3월: 러시아 대선.
  - 2012년 4월 혹은 10월: 북한 강성대국 진입 원년.
  - 2012년 11~12월: 한국과 미국 대선.
  - 2013년 1~2월: 한국, 미국, 중국의 리더십 교체.
-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남북한 및 주변 관련국의 정치지형 변화 및 이와 연관한 외교정책 변화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지 아니면 2012년에 한국이 주의해야 할 다른 안보 위협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성격에 관해 논의하고자 함.
- 본 연구는 2012년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 및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화두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본격적 이론 분석을 위한 연구가 아님을 밝힘.
- 아래에서는 남북한의 정치·경제, 동북아시아 주요국의 정치·경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보 위협 순으로 2012년 위기론을 진단하고자 함.

## 2. 2012년 남북한의 정치·경제 및 남북관계

### 가. 한국의 정치·경제

- 2012년 한국 정치는 19대 총선(4.11) 및 18대 대선(12.19)이 계획되어 있음.
- 유권자 구조 및 투표 문화에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함.
  - 총인구의 1/2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세대교체로 인해 전통적 지역주의가 많이 완화됨.
  - 최근 투표에서는 정당 충성도보다는 정책이슈에 따른 이슈투표(issue voting)와 세대효과(generational effects)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선거제도의 변화도 선거결과 예측을 힘들게 함.
  -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고 있으며 선거 직전 SNS의 집중적 활용이 선거승리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음.
  - 2009년 도입된 재외국민투표제도에 따라 240만 해외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함.
  - 세계 158개 재외공관에 위치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등록을 해야 하고 투표를 하기 위해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과 위법 선거운동을 통제할 법적 환경을 갖출 수 없다는 점이 재외국민투표의 변수로 등장함.
  
- 2012년 한국 경제는 번영/발전/성장이 아니라 위기/불확실/분배격차 관리를 요구하고 있음.
  - 빈부격차 확대는 ‘탈규제와 자유화’라는 목표로 정부의 경제 간섭을 부정하는 신자유주의의 후유증으로 비단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임.
  - 최근 수출 → 내수, 성장 → 국민생활향상의 연결고리가 약해짐.
  
- 2012년 경제 성장은 (1) 신성장동력 찾기 (2) 민간 설비투자 활성화 (3) 가계부채 완화가 관건임.
  - 가계 금융부채가 900조 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국제기준으로 볼 때 매우 높고 대부분 변동금리이므로 금리가 상승하면 소비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큼.
  - 환율정책에서는 2012년에도 경쟁 환율인 엔화 강세가 예상되므로 무난한 환율환경을 가질 것이나 투자처를 찾아 들어오는 미·중·일로부터의 유동성 과잉 유입을 조심해야 할 것임.
  
- 소규모 개방경제이자 경제운용에서 해외부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외부 충격을 항상 대비해야 함.
  - 미·중·일과의 통화스왑과 외환보유고 확충 등 완충장치가 상당히 마련됐으나 국제금융시장 운용원리에 따라 외부 충격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롭기는 힘들.

**동북아 주요국가들의  
정치리더십이  
2012년에 집중적으로  
교체됨에 따라  
그에 따른 안보위협을  
전망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 나. 북한의 정치·경제

- 2012년 북한 정치는 강성대국 진입과 3대 세습 완결이 최우선 목표임.

**북한의 3대 세습은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체제불만이  
SNS를 통해  
사회적으로 조직화될  
가능성은 낮음**

- 물자난으로 인한 강성대국 건설사업 지연으로 최근에는 ‘강성대국 진입’이 아니라 ‘강성대국 진입을 위한 토대 마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 3대 세습은 점진적 구축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제난으로 인해 김정은을 일거에 최고 국가지도자로 추대하기 곤란하므로, 인사권을 김정은에게 쥐 권력기반 공고화의 수단으로 삼는 전략을 취해 왔음. (1) 노동당원 세대교체 시작 - 고위직이 아닌 만 60세 이상 당원 100만 명을 명예당원(2010년 9월 30년 만에 당 규약을 개정해 명예당원 제도를 신설)으로 전환하고 그 자리를 20~30대 청년들로 대체함(노동당원의 수는 300만 명이며 이 중 3분의 1이 교체된다는 의미). (2) 2010년부터 혁명 2세대로 군 장성 교체를 시작함. (3) 2010년 9월 당대표자회 이후 각급 정부 및 당 간부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짐.
- 경제난으로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탈북자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통제를 강화하여 왔음.
-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등극하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및 그 직속기관인 군 보위총국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음.
  - 2011년 8월 당 행정부처, 중앙검찰소, 국가안전보위부(국가정보국), 인민보안부(경찰), 보위사령부(군보안대) 요원들로 구성된 ‘폭풍군단’을 조직해 각 도에서 검열 및 재판을 실시함.
- 중동에서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혁명’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
- 2011년 3분기 말 고려링크 가입자 수는 80만 명으로 1년 전(30만 명)에 비해 급증했으며, 북한 주민의 94%가 휴대전화망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함.
  - 북한에서 체제 불만이 SNS를 통해 사회적으로 조직화될 가능성은 낮음.
- 2012년 북한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임.
- 만성적 물자 부족으로 인한 결핍의 경제(economy of deficiency) 수준을 넘어 주요 생필품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만성적 무역적자 구조로 북한 화폐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

는 시장에서의 실질 환율 상승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를 더욱 부추기고 있음(구조적 절대빈곤 상태에서의 물가상승).

- 북한은 (1) 내각 주도의 계획경제, (2) 김정일이 직접 관리하는 당 경제 및 군사경제로 구성된 ‘수령(공정)경제’, 그리고 (3) 공식, 비공식 시장경제로 구성돼 있음.
  - 국가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불가능함.
  - 중국 위안화나 달러의 유통은 북한 당국의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정확한 경제 현황의 파악조차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 2011년 현재 북한 시장은 전국 300여 개이며, 평양에 15개가 있음.
  - 탈북자 조사에 의하면 주민들은 가계 소득의 56~65% 정도를 비공식 시장에서 벌고 있음.
  - 최근 북한 전역의 시장가격이 수렴되고 있어 가격 정보와 물류 유통 네트워크가 구축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에서 시장체제가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함.
- 장기간의 구조적 경제난은 심각한 사회병리적 현상을 낳고 있음.
  - 시장체제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만큼 편법, 부패가 횡행해 ‘국가’가 주민을 수탈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 ‘빙두’로 불리는 마약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북한의 중국 의존 심화 논란은 과장된 것으로 판단됨.
  - 북·중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국 영향력 확대를 위한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북한에서의 실제 수요발생에 의한 것임.
  - 북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전략물자로 분류돼 수출을 제한하던 무연탄을 2010년부터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음(생산량의 40%).
  - 황금평 개발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창지투 선지구 개발과 나진항 연결은 동북 3성 물류의 경제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미의회조사국(CRS)이 2011년 6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2005년 50만 톤(t) 이상이었으나, 2006년 25만 톤(t)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2007년 이후에는 약 10만 톤(t)으로 급감함.

**북·중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국 영향력 확대를  
위한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북한에서의 실제  
수요발생에 의한 것임**

**최근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한국의 대선 이전에는 의미 있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경제 개혁이 체제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체제 안보는 경제 침체에 의해 서서히 잠식되는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와 정책 부조화(policy discordance)에 빠져 있음.
- 남북관계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한국의 대선 이전에는 의미 있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천안함 폭침(2010.3.26) 및 연평도 포격(2010.11.23)을 정리해야 함.
  - 북한은 남북대화를 촉구한 2011년 초 대남 유화정책을 끝으로 5, 6월 들어 한국과의 대화를 포기함.
  - 5.24조치 이후 최근 종교·문화계 인사 방북 허용, 개성공단 투자 제한적 허용, WHO를 통한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이 이루어짐.
  - 미국 오바마 정부가 2012년 대선 전 3차 북핵 실험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한 가지 변수로, 경색 국면을 모양새 있게 풀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북한이 노골적으로 한국에게 인명 손상이나 재산 손실을 입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나, 내부적으로 체제 불안정이 증가하면 대남 기습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음.
  - 천안함, 연평도 도발로 이미 군사지도자로서의 김정은 부각에 성공함.
  - 후원국인 중국이 지역 안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2010년 5월 북경에서 이루어진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대 문제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소통의 강화’를 명시하여 북한에 대한 정책 간섭을 할 근거가 마련됨.
  - ‘핵’을 지렛대로 정권의 위상을 높이고 세습후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항상 예상을 벗어난 방법으로 기습도발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해올지 예단하기 곤란함.

### 3. 2012년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

- 동북아시아는 경제-안보 구조 부조화가 특징이나 경제적 협력 증진이 안보 대결 구도를 압도하고 있음.

- 동북아시아에서는 이미 한·중·일 간 수직분업형 국제노동분업구조가 구축되어 있으며, 역내 국가 간 경제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 수세적인 면에서는 대외 충격 방지 시스템, 특히 국제금융시장 혼란으로부터의 역내 금융안전망 개발을 위한 지역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며,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해 가동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에 의거한 역내 채권시장 발전과 궁극적으로 금융시장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공세적인 면에서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기술표준, 거래규칙 등에서 지역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세계표준으로 해야 할 것임.
  - 역내 국가들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아직 상호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서로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ASEAN+3 정상회의(1997년 태동), 동아시아정상회의(EAS)(2005년 태동), 한·중·일 정상회의(2008년 1차, 금년 4차), 미중 경제전략 대화(2009년 시작)에도 불구하고, 미·중, 한·중, 중·일, 대만·중국은 안보적 측면에서는 서로 잠정적 적성국가임.
  - 이들이 모두 이념 대결보다는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원하는 것을 감안할 때, 고강도 정치군사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낮으며 저강도 분쟁의 형태로 전략적 이익이 상호 충돌할 가능성은 상존함.
- 2012년 한국의 대외관계는 큰 변화 없이 한미동맹을 축으로 중국과의 우호친선 관계 유지와 다양한 다자협력레짐의 참여 증대가 특징이 될 것임.
- 한미관계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2009년 6월 한·미동맹미래비전 채택, 2010년 6월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5년 연장 등 기존 관계 유지 관리가 위주가 될 것임.
  - 미국 경제회복 지원과 재정 적자에 따른 국방비 감축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액 증액과 국제분쟁에서 한국군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한미 FTA는 한국 수출 제조업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나 농·축산물이나 서비스 시장에서는 미국의 진출로 인해 어느 정도 피해를 보게 될 것임.
  - 한국은 G2로 상징되는 미중 군사경제 갈등 구도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노선을 걸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임.
  - 미·중, 중·일 경쟁구도에서 중재자, 중간자 역할을 통해 외교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2011년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유치 등).

**동북아에서 고강도  
정치군사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낮으며 대신  
저강도 분쟁의 형태로  
전략적 이익이 상호  
충돌할 가능성은  
상존함**

**동북아에서 안보문제의  
해결은 양자 간  
접근보다는 다자 간의  
최소주의적 접근법  
(minimalist  
approach)이 현실적  
실행가능성이 있는  
대안임**

-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한다면 더욱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2012년 3월 국제안보 분야 대규모 정상회의인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를 개최함으로써 북핵 이슈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임.
  -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의 2차 핵실험(2009.5)을 비난하고 UN안보리 결의 1784호 채택에 찬성함.
- 강대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동북아시아에서 양자 간 접근으로는 안보 문제 해결이 곤란하며, 다자간의 최소주의적 접근법(minimalist approach)이 현실적으로 실행가능성이 있는 대안임.
  - 6자회담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 가. 미국의 정치·경제

### 1) 정치

-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의 재선 가능성은 매우 높음.
  - 미국 대선은 본래 현역이 유리함.
  - 공화당은 마땅한 후보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65세 이상 인구가 늘면서 이들이 자신들을 보수로 인식하고 공화당에 표를 던지는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으나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함.
  - 미국 유권자들은 이미 느린 경기회복과 만성적 실업에 익숙해 있음.

### 2) 경제

- 2012년 미국 경제는 더 악화되지는 않고 그렇다고 급속히 V자형 회복을 보이지도 않는 매우 완만한 경제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 미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민간경제는 주택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적어도 2013년까지는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후유증을 치유하기 힘들 것임.
  - 총 주택가격은 2006년 정점에 이르렀을 때 13조 달러였는데 2008년 중반 8.8조 달러로 32% 급감했으며, 주택 다음으로 큰 가계자산인 퇴직연금 같은 시기 동안 10.3조 달러에서 8조 달러로 22% 감소했고, 저축, 투자 등 다른 금융자산 가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하락을 면치 못했음.

- 단기간에 해소가 불가능한 ‘쌍둥이’ 적자와 야당인 공화당과의 약정으로 인해 재정을 동원한 대규모 경제부양책은 실시하기 힘든 상황임.
  - 국가부채는 최근 6년 동안 급증해 그 규모가 2010년 말 14조 달러를 초과하고 이는 국민 1인당 4만 5천여 달러(5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2005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때 국가부채는 7조 6천억 달러였으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연이어 전쟁을 벌이면서 빚이 10조 6천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오바마 정부도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4조 달러의 부채가 발생함.
  - 2010 회계연도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는 1조 2,300억 달러로, 정부지출의 약 40%가 상무성 채권으로 충당됨.
  - 막대한 부채로 인해 미국은 연간 국채이자만으로 2천억 달러(240조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25년에는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미국은 의회가 총 정부부채 규모를 14조 3천억 달러로 정해놓고 있었으나, 이를 준수할 가능성이 없자 2011년 8월 의회가 4천억 달러를 증액해 줌.
  - 중간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킨 강경 보수파 ‘티파티(Tea Party)’는 국가부채 한도 증액 전제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해 이를 관철 시킴.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2012년도 새로운 통화량 공급을 통한 경기부양정책 즉, 3차 양적완화(QE3: quantitative easing 3)를 실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대신 낮은 이자율을 통한 통화량 확대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QE1(2009.3~2010.3, 1조 7,500억 달러)과 QE2(2010.11~2011.6, 6천억 달러)는 실물경기 추락을 막기는 했으나 경기 회복에는 성공하지 못함.
  - 버냉키 연방은행 총재는 2011년 8월, 2008년 12월 이후 유지되어 온 0.25% 이하의 기준금리를 2013년 중반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국 경기침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경기부양 기조를 확실히 해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임.

**느린 경기회복과 만성적  
실업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강력한 후보  
부족, 유리한 현직  
효과 등으로 인해  
오바마의 재선가능성이  
매우 높음**

**2012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화두는  
북핵 불안정의 해소와  
주한 미군 주둔비 감축  
및 한미 군사활동에서  
한국군 역할의 증대  
요구일 것임**

-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국방비를 포함,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이 불가피함.
  - 더욱이 2011년부터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연금이나 복지 지출이 급증할 전망이다(7천 8백만의 1946~64년 전후 세대가 2011년 65세가 되어 은퇴하기 시작 - 노인 의료 보험(Medicare) 및 사회보장제(Social Security)의 지출이 증가하기 시작).

### 3) 한반도 관계

- 2012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화두는 북핵 불안정의 해소와 주한 미군 주둔비 감축 및 한미 군사활동에서 한국군 역할의 증대 요구일 것임.
  - 2011년 6월 협상에서도 한국 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이러한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임.
  - 향후 10년간 최대 2조 4천억 달러의 정부지출을 삭감하기로 한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안은 국방비 지출 삭감을 주 내용으로 함.
  - 한국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미국에게 고급 군사기술 등을 요구해 이 기회에 자주국방의 기틀을 더욱 다져야 할 것임.

## 나. 중국의 정치·경제

### 1) 정치

- 2013년 초 후진타오 퇴진 및 5세대 시진핑 주석 취임이 확실함.
  - 집단지도체제인 중국 공산당의 특성상 한반도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임.
- 중국은 2012년에는 외치보다 사회불안을 해결하는 내치에 더 치중할 것임.
  -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누적된 빈부격차 등 사회적 불만, 부동산 가격 등 물가 상승, 취약한 노동권, 부패, 환경오염 등을 해결해야 함.
  - 소득계층별, 지역별, 도농 간, 민족 간 소득격차가 날로 확대해가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음.

### 2) 경제

- 두 자릿수는 아니더라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나, 전술한 바

- 와 같이 경제성장의 질 즉, 물가상승과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함.
- 2009년에 독일을 넘어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 되었고,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2011년 외환보유액 3조 달러를 초과하여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이 됨.
  - 2012년 위안화 국제통화화를 꾸준히 추구할 것임(무역결제 통화화부터 시작하여 위안화 채권시장 정비와 개방 그리고 위안화 국제통화화의 단계를 거칠 것임).
  -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을 위해 유동성을 급격히 공급한데다 국제곡물가격 인상과 잦은 기상 이변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함.
  - 중국은 12차 5개년계획(2011~2015)에서 ‘바오바(保八·8% 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연평균 성장률을 7%로 낮춰 노동자 소득을 증가시켜 사회불만을 억제하고, 2011년 보안 예산을 지난해보다 13.8% 증가한 6,240억 위안으로 책정해 치안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도시에 서 거주한 농민공에게 도시 호적을 허용함.
  - 2012년에는 수출보다 부민공정(富民工程)의 목표로 소비 증진을 통한 내수 확대와 5년간 매년 평균 9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노동자 최저임금 매년 13% 인상 그리고 3,600만 채의 서민 주택 건설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계획임.

### 3) 한반도 관계

- 한중 간 경제 및 인적 교류는 매우 활발하나, 김정일 정권 제재 및 북핵 이슈에서 이견이 심각함.
  - 한국은 부품·소재 및 자본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들을 가공·조립하여 미국과 EU 지역에 수출하고 있음.
  - 한국의 2010년 대중 수출은 1,384억 달러이며 무역수지 흑자는 696억 달러임.
  - 양국은 2010년 말까지 양국은 정상회담 13회, 외교장관회담 15회 등 고위인사 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왔으며, 연간 인적교류 600만 명, 매주 항공편 52개 그리고 항공노선 837회에 이르고 있음.
- 한국은 대북정책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는 데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은 당분간 한반도 이해관계에서 북한을 지지할 것으로 보임.
  - 전략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한 통일외교가 매우 시급하며, 김정일 정권 붕괴나 통일한국이 중국의 국익에 위배되지 않음을 설득시켜야 함.

**중국은 2012년에  
외치보다 사회불만을  
해결하는 내치에 더  
치중할 것이고  
당분간 한반도  
이해관계에서 북한을  
지지할 것으로 보임**

일본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정치리더십  
문제가 계속 국가능력에  
제한을 가할 것이고,  
다방면에서  
'경기침체' 증후를  
보일 것임

## 다. 일본의 정치·경제

### 1) 정치

- 구조적으로 취약한 정치리더십 문제가 계속 국가능력에 제한을 가할 것임.
  - 의원내각제, 단조로운 정당 이념, 중의원과 참의원의 대립, 정당 내 고질적 파벌, 강력한 관료제로 인해 수상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음.
  - 나카소네(中曾根康弘, 1982~87) 이후 정치리더십이 실종하면서 재정이 계속 악화됨.
  - 1989~2010년 12년 동안 9명의 총리가 평균적으로 1년 안팎의 임기를 수행하고 교체됨.
  -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의 이해 충돌이 있을 경우 책임을 뒤로 미루는 책임회피 문화로 인해 정책 일관성이 보장되지 못함.
  - 2011년 8월 95대 총리로 취임한 민주당의 노다(野田佳彦) 총리는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일본 정치의 '리더십 실종 메커니즘'을 타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2) 경제

-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음.
  - 인구 노령화 및 감소 그리고 정치리더십 실종으로 장기간에 걸친 축소재생산의 구조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 높은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GDP 성장률, 경상수지, 물가, 환율 등에서 모두 '경기침체' 증후를 앓고 있음.
  - 실질 GDP 성장률은 최근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2008년도 -4.1%, 2009년도 -2.4%에 따른 기저효과임.
  - 경상수지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2조 엔과 16조 엔의 흑자 기록, 2006년과 2007년에 달성한 20조 엔 초과 실적의 크게 밀둔 후, 2010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소비자물가지수도 2009년 3월 이후 계속해서 전년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 여전히 심각한 디플레이션 상태임.
  - 국가 부채 1,000조 엔(약 1경 3,607조 원) 시대에 진입했으며,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11년 200%를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임(그러나 일본 국채의 대부분(95.4%)은 국내 투자임).

- 일본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4.6%로 유럽 국가는 물론 한국 27.9%나 미국 26.4%보다 낮은 수준이나 국민이 소비세율 인상에 매우 민감함.
  - 실업률은 2010년 7월 최고 5.2%에서 2011년 9월 4.1%로 하락해 국제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에 거의 근접했음.
- 2012년에도 엔고로 인한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제조업 기반을 잠식할 것임.
-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은 2008년 11월(평균치)에 달러당 100엔 수준에서 계속 하락해 2011년 1월 82.1엔, 10월 75.8엔으로 하락하고 있어 엔고로 인한 수출 부진이 심각함(1991년 버블붕괴로 인한 내수침체를 상쇄하기 위해 수출비중을 그동안의 10%에서 거의 20% 수준까지 증가해 왔음).
  - 미국과 유럽의 경제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돼 엔고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임.
- 인구 고령화 문제가 2012년 일본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임.
- 2012년부터 단카이(團塊) 세대(1947~49년 출생자로 2007년 일제히 정년퇴직) 700만 명이 본격적으로 연금 수여 시작함.
  - 2009년도 일본의 연간 공적연금 지급 총액이 50조 3천억 엔이었으나(GDP의 10%를 넘어선 규모), 2015년 59조 엔, 2025년 65조 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있음.

### 3) 한반도 관계

- 일본은 동북아 관련국의 대북정책 전개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음.
- 기존처럼 한미의 대북정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며,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 관한 강경 입장은 과거보다 약화될 것임.

**일본은 기존처럼 한미의 대북정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며,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 관한 강경 입장은 과거보다 약화될 것임**

## 라. 러시아의 정치·경제

### 1) 정치

- 2012년 3월 대선에서 푸틴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음.
- 강력한 대통령이 이끄는 개혁 성향의 행정부와 보수 성향의 양원제 입법부가 과거와 큰 변화가 없는 정책을 펼칠 것임.

**러시아는 미국 견제와  
한반도 현상유지가  
전략적 목적이고,  
한반도 문제를  
이념적으로 인식하는  
중국과 달리 이익의  
교환을 통한 설득이  
가능함**

-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2년 푸틴이 당선되고 또 2018년 연임에 성공한다면 2024년까지 통치할 수 있음.

## 2) 경제

-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출대국으로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세를 이뤄왔으나, 내수와 고용 등 국내 실물경기는 여전히 저발전 상태에 있으며, 유가 등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고 높은 물가고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아직 WTO에 가입하지 못한 개발경제 수준임.
  - 국제유가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임.
  - 물가 상승 및 빈부 격차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임.

## 3) 한반도 관계

-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진출 견제와 한반도 현상유지가 전략적 목적임.
  - 러시아의 국제 전략은 미국 헤게모니의 견제와 러시아 강대국 지위의 복원임.
  -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에서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것은 미국 견제의 목적임.
  -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은 북핵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붕괴는 미군의 북진을 의미하므로 원하지 않음.
  - 북핵 실험에 따른 UN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는 동의하면서도 천안함 폭침 때는 중국, 러시아의 비협조로 UN 대북제재 조치 수준이 의장 성명(presidential statement)으로 끝남.
- 한반도 문제에 이념적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중국과 달리 국가 간 안보경제 이익의 교환을 통한 설득이 가능함.
  - 에너지 분야에서의 경제협력뿐 아니라 각종 사회경제 교류협력을 강화해 한국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함.
  - 중국과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이 러시아 국익에 도움이 됨을 설득시키는 외교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4. 2012년 국제 정치경제

- 국제사회의 지배 거버넌스는 더욱 다극화될 것임.
  - G2와 G20가 기존의 G7(8)을 실질적, 상징적으로 대치하는 모양새가 될 것임.
  - 미국주도의 일방주의적 다자주의(unilateral multilateralism)나 비대칭적 상호의존(asymmetrical interdependence)은 과두적 다자주의(oligarchic multilateralism)나 다양한 차원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상호의존으로 변화할 것임.
- 기본적으로 정치적 분산(political fragmentation)과 사회경제적 세계화(socio-economic globalization)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해 국제사회의 안보경제적 문제들이 급격히 안정을 이루지는 못할 것임.
  - 국제사회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동안의 학습효과와 복잡한 거버넌스 기제의 제도화를 통해 2011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G2는 연례 미중 전략경제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2009년 발족)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국력과 영향력이 월등함을 상징하기 위해 명명됨.
  -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 군사력 열세를 항공모함 건조, 제5세대 스텔스기 개발, 최첨단 미사일 시리즈, 우주무기 개발로 만회하려 함.
  -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08년 2,269억 달러에서 2010년 2,731억 달러, 2011년 1~9월 2,174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2010년 12월 외환보유고는 2.88조 달러였음.
  - 미국은 1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미 국채 보유 외에도 경제회복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며, 국제정치적으로도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그리고 환경, 기후, 테러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함.
- 2012년 세계경제는 더 이상의 침체에 빠지지도 그렇다고 본격적 회복도 이루지 못하는 답보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의 본격적 경제회복이 이루

**2012년에 국제사회의 지배 거버넌스는 더욱 다극화되고, 국제사회의 안보경제적 문제들이 급격히 안정을 이루지는 못할 것임**

**2012년 미국과 유럽의  
경제는 회복이  
더디거나 침체될  
가능성이 높고  
그 대신 BRICs가  
세계경제발전의  
동력을 제공할 것임**

- 어질 가능성이 낮음.
- 유럽은 연 1%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기 경제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며 높은 실업률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임.
  - EU 국가들의 재정적자 폭은 2011년 4.1%에서 2012년 3.4%로 낮추기로 계획되어 있음.
  -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채권의 부실화와 이들 채권을 다량 보유한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은행들의 파산이 문제가 될 것임.
  - EU 내에서 독일과 영국,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이견을 보여 유로화 위기를 극복할 통합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 2012년에는 BRICs(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가 세계 경제발전 동력을 제공할 것임.
- 2009년 발족한 브릭스(BRICs)는 2011년 중국 하이난(海南) 제3차 연례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아공을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BRICs'로 확대됨.
  - 5개 회원국의 면적은 전 세계의 약 30%, 인구는 42%, 국내총생산(GDP)은 세계경제의 18%, 무역액은 15%를 차지함.
  - 브릭스도 기존 질서에서 이익을 봐 온 게 사실이므로 기존 질서를 바꾸는 혁명적 방식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신국제질서를 구축하고 미국과 선진국이 주도한 기존의 '게임의 룰(경기 규칙)'을 개혁해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고자 할 것임.
- 무역자유화는 2008년 이후 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WTO를 통한 다자 간 접근보다 FTA를 통한 이해당사자 간 최소주의 접근(stake-holders' minimalist approach) 방식에 의해 추진될 것임.
- WTO의 DDA협상은 농업 및 비농업 시장접근에서 국가 간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음.
  - 협상 타결을 촉진하고자 도입한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원칙이 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고 있음.
- 대형 신흥경제국(NIEs)들이 경제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2012년 세계 경제는 식량,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직면할 것임.
-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는 원인인 동시에 결과가 되어 곡물과 에너지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것임.

- 미국과 중국이 주도한 국제 유동성의 급격한 공급으로 전 지구적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함.
- 취약국 그리고 각 국가의 취약계층은 더욱 타격을 받을 것임.

## 5. 맺음말: 2012년 한반도 위기설 종합 진단

- 2012년 한반도는 새로운 위기를 맞기보다 기존의 위기 특히, 북한 돌발변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변화보다는 지속(continuity)을 특징으로 할 것으로 예측됨.
  - 한국 국내 정치와 경제는 모두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임.
  - 북한은 정보 부족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심각한 경제 관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핵 문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6자회담의 틀에서 핵개발과 경제적 보상을 교환할 가능성이 높으나, 만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이 확실시된다면 관련국 간 협력이 곤란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한미관계는 여전히 우호적 동맹관계를 지속할 것이나 미국의 경제 회복 지연과 정부지출 축소에 따른 국방비 감축을 보완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경비 한국 부담분의 증액을 요구할 것임.
  -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국내 정치경제 혹은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별로 없음.
  - 국제정치경제의 화두는 군사안보보다 경제안보 혹은 비전통안보(non-traditional security)가 될 것임.
  - 미국과 일본, 유럽 등 구세력의 약화와 동아시아와 BRICs의 부상에 따른 국제 역학관계와 세계질서의 재편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임.
- 2012년 남북 및 한반도와 관련한 각국 리더십 교체의 안보정책적 의미는 커다란 변화 없이 기존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임.
  - 한국에 대한 가장 심각한 안보 도전은 북한 문제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며 따라서 주변 관련국 간의 선제적 공동대처 협의를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영향력을 발휘할 별다른 지렛대(leverage)가 없고, 내부 자체의 동학으로 움직이는 북한을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 통일외교의 강화를 통해 남북통합과 통일문제에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

*2012년 한반도는 새로운 위기를 맞기보다 기존의 위기 특히, 북한 돌발변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변화보다는 지속(continuity)을 특징으로 할 것으로 예측됨*

**2012년 주변국의 리더십 교체는 실제 시기적으로도 상당한 괴리가 있어서, 러시아 대선에서 한, 미, 중의 정권 교체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예정**

가 있음.

- 2012년 한국 경제의 과제는 침체된 세계경제 상황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경제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임.
  - 양질의 고용 증가를 통한 가계소득의 증가와 빈부격차 해소가 중요하며,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함.
  - 대선과 총선을 앞둔 민주주의적 복지정책의 남발과 소모적 여야 정쟁을 경계해야 할 것임.
- 2012년 주변국의 리더십 교체는 실제 시기적으로도 상당한 괴리가 있음.
  - <표 1>에서 보듯이, 3월 러시아 대선에서 2013년 초 미국, 한국, 중국의 정권 교체까지 약 1년이 소요됨.

〈표 1〉 한반도 관련 주변국 정권 교체 일정



- 선거민주주의 체제에서 리더십 교체가 기존 외교정책에 변화를 주려면, 여론 변화, 정치엘리트의 여론 인식, 외교정책의 캠페인 의제화 등 많은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집단지도체제인 중국에서 한반도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북한은 3대 세습과 강성대국 진입 선포가 무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부에 대한 호전적 도발을 통해 난국을 돌파하고자 할 것임.

**기획 및 감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 저자 약력

---

### ■ 정상화

現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북방학회 회장, 통일신문 논설위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1996년 미국 Univ. of Missouri에서 “Political Economy of Elections in East Asia: The Sensitivity of Money Supply to Elections”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연세대학교에서 연구교수 그리고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하였음.

## JPI 정책포럼 현황

- 박재선 『미국의 유대인파워』 (2011년 10월)
- 마영삼 『공공외교의 현황과 우리의 정책 방향』 (2011년 9월)
- 정기웅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국 스포츠 외교: 방향성의 모색을 위한 제언』 (2011년 9월)
- 김동성 『동아시아 전략적 3국 관계와 한국외교의 대응방향』 (2011년 9월)
- 우준모 『다시 열리는 푸틴의 시대: 러시아 정치 전망』 (2011년 8월)
- 고선규 『일본의 민주당 정치와 한일관계』 (2011년 8월)
- 정지웅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일전망』 (2011년 8월)
- 조태열 『한국의 ODA 정책과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 (2011년 7월)
- 홍현익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극동정책』 (2011년 7월)
- 진행남 『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2011년 7월)
- 양창석 『독일 통일 교훈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2011년 6월)
- 박동훈 『경제위기 이후 중·미관계 변화와 한반도』 (2011년 6월)
- 임수호 『북·중경협 현황과 전망』 (2011년 6월)
- 이기현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동맹의 동학』 (2011년 5월)
- 박상현 『에너지 안보의 동학과 일본 원자사태』 (2011년 5월)
- 김종선 『원자력 사고의 국제 대응체제의 강화 필요성: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2011년 5월)
- 이면우 『대지진 이후의 일본 위상과 동북아질서』 (2011년 4월)
- 김병로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전략』 (2011년 4월)
- 김동성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 (2011년 4월)
- 김중섭 『미중관계의 정상화와 대만』 (2011년 3월)
- 고성준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의 개발: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 이홍섭 『러·중 군사협력의 동향과 장래』 (2011년 3월)
- 김두진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거대기업의 역할: EU사례의 함의와 적용』 (2011년 2월)
- 염돈재 『독일통일의 쟁점과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2011년 2월)
- 정영태 『서해해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방안』 (2011년 2월)
- 김태환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2011년 1월)
- 안찬일 『북한의 다각적 평화공세와 체제전환 가능성』 (2011년 1월)
- 황지환 『남북관계의 국제정치』 (2011년 1월)
- 성원용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력공급체계와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 (2010년 12월)
- 고상두 『동북아 다자협력체 구축조건: 통일독일의 경험이 주는 함의』 (2010년 12월)
- 김갑식 『북한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 (2010년 12월)
- 박홍영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한국에 주는 함의』 (2010년 11월)
- 최희식 『중일 첨각열도 해양영토분쟁: 평화적 관리 방식의 전환기?』 (2010년 11월)
- 김미경 『일본의 반핵평화주의와 안보현실』 (2010년 11월)
- 김수암 『탈북자의 현황 및 인권』 (2010년 10월)
- 원동욱 『중국 대외원조의 현황과 추세: ‘불량국가’ 지원과 그 시사점』 (2010년 10월)





#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www.jejuforum.or.kr](http://www.jejuforum.or.kr)

##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제주평화연구원 (697-120)  
Tel. 064-735-6532 또는 533 email. [jejuforum@jpi.or.kr](mailto:jejuforum@jpi.or.kr)  
homepage. [www.jejuforum.or.kr](http://www.jejuforum.or.kr)

### 제주평화연구원은

2011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에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주관하였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라는 대주제 아래 평화와 안보, 경제, 경영, 환경, 문화, 여성, 의료, 도시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국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아시아 지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김황식 국무총리, 아로요 필리핀 전대통령, 자오칭청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고위인사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고, 64개 세션에 세계 22개국에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중국 중견기업인 100여명을 포함, 국내외저명인사 1,8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회의로서 종합국제포럼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 개최식에서 공식화된 바와 같이 이제 제주포럼은 격년제 개최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 기획단을 발족하여 2012년 5월-6월 중 제7회 제주포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대의 종합국제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7회 제주포럼 부터는 포럼의 의제와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기관과 단체가 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션을 대폭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7회 제주포럼에 대해 귀기관과 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주포럼에 대해서는 포럼 공식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럼 참가문의는 제주포럼 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